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의

민영화·빅딜 저지 투쟁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

들어가면서

민영화와 빅딜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 간의 공방으로 뜨거웠던 한국중공업(이하 한중) 사태는 작년 12월 27일 노사 대표 간에 이뤄진 잠정합의안이 다음날 제적 조합원 4,722명 가운데 3,548명이 참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490명(70.18%)

의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11월 10일 시작되었던 한중 노조의 48일에 걸친 장기파업은 종결되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민영화 정책은 일단 좌절되었다.

이번에 이뤄진 타결 결과를 두고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은 "참으로 위대한 노동자들의 발자국"이라면서

“국민의 정부의 정책 기조인 신자유주의를 노동자의 힘과 지혜로 저지하는 쾌거를 이룩해” 냈다고 평가했다(『미디어 오늘』 1월 6일자).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민영화 일정을 지연시키고, 경제 논리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한중 노사의 합의 결과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몰아세웠다(『문화일보』 1월 10일자 사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노동과 자본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이번 한중 사태는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충돌에서 노조가 투쟁과 협상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일방적인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투쟁을 성과있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사태의 배경과 발단

한국중공업은 사업부문이 발전사업(원자력, 화력, 수력)과 비발전사업(선박용엔진, 건설)으로 나뉘며, 두 부문의 매출액 규모는 발전사업이 54%로 조금 크다. 지분은 산업은행(43.8%), 한국전력(40.5%), 외환은행(15.7%)이 갖고 있으며,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주문생산에 의존한다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 91년 이후 연속 8년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이익잉여금이 98년 말 5,540억 원이나 되고 부채비율은 128%에 불과한 중공업 7천여명의 우량기업이다.

원래 발전설비 부문은 한국중공업이 독점해오다, 김영삼 정부가 “공기업을 방만

한 경영과 효율성 문제”를 들어 삼성과 현대가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발전설비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부문이 부실하게 되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한중으로의 발전설비 통합을 통한 한중 민영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민영화 시도가 있었다. 작년 상반기 제철들의 빅딜 문제가 이야기될 때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문제도 물밑에서 거론되었고, IMF 사태 이후 98년 7월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여 이를 추진해 오다 작년 11월 9일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 빅딜 합의 발표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발전설비 및 엔진관련 빅딜 합의 발표안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부문을 한국중공업으로 통합하고, 삼성중공업과 한국중공업의 선박엔진 부문을 합쳐 엔진관련 별도 법인을 만든 이후 한중은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한중을 분할하여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빅딜 합의 발표 이후, 이미 99년 3월에 있던 민영화 관련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90%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었던 한중노조(위원장 손석형)는 11월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빅딜 반대·민영화 반대

초기에 노조는 투쟁기조를 '빅딜 반대·민영화 반대'로 잡고, 그 방향을 대정부투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위노조를 뛰어넘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차원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재벌의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낳은 부실화된 사업을 건설한 공기업인 한중에 떠넘기려는 정부정책의 허구성을 알려나가면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빅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곧 재벌로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임을 알려나가며,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한편 노조는 마산·창원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중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기구를 만들고, 시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차원의 연대와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자 대회 참가 및 기획예산처 앞 집회 등 상경투쟁을 조직하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지구당농성도 조직하면서 정부와 사측을 압박해 나갔다.

파업 11일째인 11월 20일야 노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협상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을 통해 산자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노정 교섭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파업이 보름을 넘어서면서 사측은 노조

● 노조안(1999.12.9)

1. 소유지배구조

- 정부지분 40%(산은 26, 한전 15),
- 우리사주 20%,
- 해외업체 5%,
- 해외업체 20%
- 일반공매 15%

2. 경영참가

- 사장추천위원 1인 노조 추천
- 비상임이사 추천
- 이사·감사 후보 노조와 상심협의

3. 우리사주

- 우리사주분으로 20% 배정
- 우리사주 매입자금 지원
(분할상환, 차익금·특지기금 하용, 보조금 지급)

4. 고용보장

- 기존 단협 승계

- 단체협약에 정치 마련
- 영건 조합원 고용 및 근속년수 보장
- 영건 조합원 관련 2사 1노조 보장
- 시간 전보, 노사공동유 합의로 가능
- 위로금, 격려금 지급

5. 기타

- 인형사상 책임 및 징계 취소 및 철회
- 직장발전기금 지급

● 특징

- * 고용보장 방안 마련
- *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한 경영참가 제도 마련
- * 재벌참여 확대치는 일반공매주 15%로 사실상 재벌 배제
- *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인정
- * 발전상이 일원화 인정



상인들인 12월 25일 사측이 1천 5백명을 동원하여 재물을 빼내려 시도하면서 조합원과 충돌하였다.

간부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작업복귀명령'을 발표해 파업 방해와 조합원 분열을 시도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12월 4일 파업불참자 26명을 제명처리하고, 4명을 경고하는 등 파업대오와 투쟁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과 타결

별다른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12월 4일 노조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지구연합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취하기 위해 "투쟁도 힘차게" 해야 하지만 "협

상도 실질적 내용으로 하기로" 하고 12월 7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협상 대안을 마련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노조는 ① 내부 구성원 중심의 주식분산, ②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조합 및 우리사주 조합의 참여, ③ 단체협약에 고용보장 방안 마련, ④ 우리사주 취득 자금 지원, ⑤ 우리사주조합의 장기적 기금 안정, ⑥ 연건 빌도법인에의 동일한 단협적용과 고용안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한편, 사측에도 "빅딜·민영화에 따른 동반부실과 재벌메카이나 해외메카에 의한 구조조정, 고용불안, 기술중축, 국부유출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과업 한 달을 넘기던 시점에서 노조가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적극 나서자 뚜렷한 안이 없던 사측은 협상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12월 1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안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결집시켜내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공세적인 협상과 더불어 조합안을 선전하는 등 국민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도 병행했다. 12월 16일 기존의 시민연대를 틀을 뛰어넘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한중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마산역에서 금속산업연맹과 공동주최로 조합원 시민이 함께 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국민회의 지구당사로의 집중

농성을 전개했다.

노사간에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12월 22일 창원지법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빅딜·민영화와 관련하여 불법단체행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결정하여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마련한다는 의구심을 낳았고, 12월 25일 사측이 1,500명을 동원하여 제품을 빼내려 시도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분의 우위 속에서 이를 극복해낸 노동조합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12월 27일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명분의 우위를 잡힌 노동조합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12월 27일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투쟁의 성과와 교훈

합의의 내용은 정부와 사측이 민영화와 빅딜 원칙을 관철하는 명분을 얻고, 노조가 경영권이 재벌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재벌매각·해외매각은 하지 않으며, 고용보장과 우리사주조합에 법적 최고한도의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통한 경영참가의 단초를 확보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합의안을 둘러싸고 산자부의 발표 내용에 따른 견해 차이로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와 합의안에 반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애당초 '빅딜 반대·민영화 반대'라는 기조 속에서 파업을 시작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반대를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투쟁의 방향과 전망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부딪혔다. 게다가 급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이 산업/전국 차원의 전선을 만들 수 없었고, 단위노조 홀로 정부 정책에 맞서야 했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연맹이나 노총조차 민영화나 빅딜같은 구조조정 문세에서 '반대나 거부' 이외의 정책이나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위노조 차원의 선도투쟁이 초래할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방적

인 민영화 드라이브와 재벌의 기간산업 소유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고, 고용보장과 우리사주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후 경영참가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장기 파업이었음에도 노조의 유연한 대응으로 조직력을 보존할 수 있었고,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크게 강화시켰던 한중투쟁은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투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노조 진영에 좋은 모범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12월 27일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고용보장과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기타 합의사항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내려는 노력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노조 조직력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역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측의 공세도 막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 더군다나 합의안에 대한 해석도 산자부와 노동조합이 각각 다른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일은 산갈이 많다.

더우기, 이후의 대응의 내용과 차원은 단위노조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한중노조 투쟁은 산별연맹과 노총에 있어서 고용안정, 경영참가, 민영화·구조조정, 전국/산업 차원 교섭를 구축 등의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